

구글·애플 인앱결제 ‘30% 룰’ 국내 개발사·이용자 부담으로

과방위 국정감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수수료 26% 낮춘 썬스 외부결제

방통위, 과징금안 의결 지연에 국내 콘텐츠 생태계 고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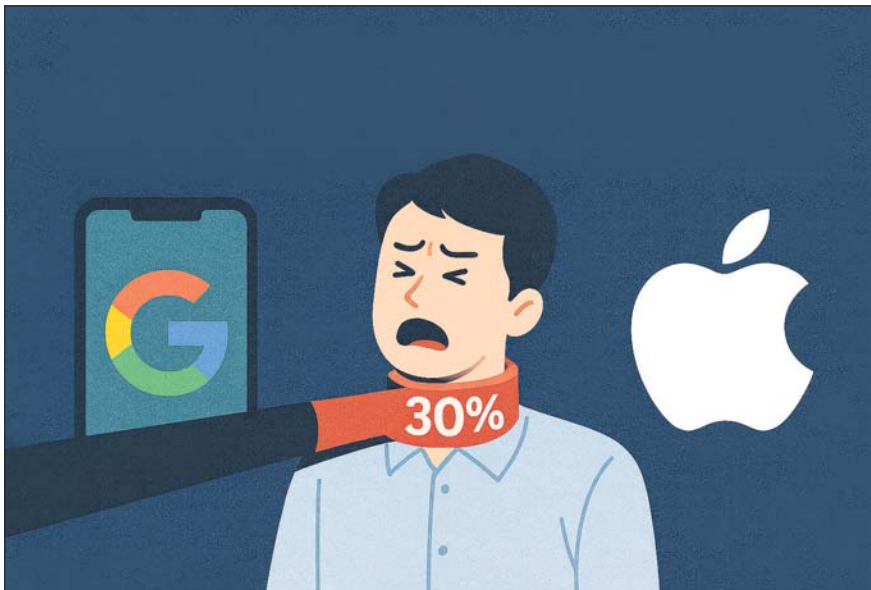
인앱결제 ‘30% 룰’이 여전히 한국 개발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26%로 낮춘 ‘썬스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630억 원 규모의 과징금마저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사이, 국내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구조에 종속돼 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듯했으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6%로 소폭 낮추는 ‘썬스’를 부렸다. 여기에 결제대행(PG)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들의 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인앱결제 ‘30% 룰’이 한국 개발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미지.

고스란히 중소 개발사들에 돌아가고 있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간 이어지면서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지고 회사도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토종마켓은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시장 선순환을 꾀하지만, 구글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크리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30% 수수료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개발사들의 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630억 원으로 조정된 과징금은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겹치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의결 및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의결을 미루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그 부담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자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이 표류하는 사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더니 사실상 26%짜리 다른 인앱결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라며 “국내 마켓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軍 통신중계 드론 작전반경 확대

코난테크놀로지 등 4개사와 ‘맞손’ 상용망 800MHz 등 저주파 대역 활용

SK텔레콤은 군용 드론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편진·코난테크놀로지·콘텔라·플렉토리와 통신 중계 드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남산 SKT 사옥에서 열렸으며, 나경환 SKT 엔터프라이즈솔루션본부장, 김정훈 편진 사업전략본부장, 김규훈 코난테크놀로지 국방AI사업부장, 김태연 콘텔라 MTS사업부문장, 김태훈 플렉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통신 중계 드론은 통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무선망을 중계해 공격·정찰용 드론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군은 이음 5G 주파수를 활용 중이지만, 고주파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제한돼 작전반경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통신 중계 드론은 상용망의 800MHz 등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다. 저주파는 회절성이 높

고 도달 거리가 길어, 산악이나 도심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수의 중계 드론을 교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핸드오버(handover) 기술을 적용해, 한 대가 손상되더라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사는 전문 영역별로 기술을 맡는다. SK텔레콤은 무선 회선, 핸드오버 기술, 실시간 영상 관제를 담당하며, 저주파 대역과 영상 관제 시스템 ‘T라이브캐스터’를 결합해 실시간 드론 영상을 후방 조종사에게 전송한다. 편진은 드론 무선품질 측정과 AI 기술을, 코난테크놀로지는 옛지 전술 장비를 제공한다. 콘텔라는 위성 기반 이동기지국을, 플렉토리는 미니 PC 기반의 이음 5G 코어 장비를 맡는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용망 기술을 군 통신 체계에 적용하고, 드론 작전 반경 확대와 국방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B, AI로 고객불편 사전 감지·해결

품질관리시스템 ‘아쿠아’ 도입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B tv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해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아쿠아(AQUA, Advanced Quality&Usage Analytic system)’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QUA는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치하는 고객경험지표(CE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위해 모든 B tv 셋톱박스에서 매일 22억건이 넘는 데이터를 수집해 24시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이 시스템은 방송설비, 네트워크, 셋톱박스, TV 등 전체 서비스 구간의 약 740개 품질 지표를 분석한다. AI는 이를 토대로 셋톱박스별 서비스 품질을 S~D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잠재 불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B tv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해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AQUA’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SKB

편 고객’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이나 VOD 재생 지연 등의 문제를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 사례가 연간 약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해외 게임사 책임성·투명성 강화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시행
민원 편의성 ↑, 위법행위 감독
중소 게임사 진입장벽 우려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업체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대형 게임사에 실질적 책임 체계를 부여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절차가 강화되면 중

소 외산 게임사의 국내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번 제도는 국내 이용자가 언어 장벽이나 해외 본사 접근 문제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유통이나 사행성 조장 등 위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한국어 서비스나 국내 결제 수단 제공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앱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지정 의무에서 제외한다.

지정 요건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에서 일평균 1000건 이상 다운로드된 게임 배급·제공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해 문제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문제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은 문제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 방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각종 보고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년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부는 국문·영문 안내서를 제작해 해외 기업에 배포하고, 향후 국내 법인 우선 지정과 유통 중단 명령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라며 “해외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모빌리티, ‘로봇발레 주차’ 상용화

케이엠피크-HL로보틱스 ‘맞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파크, HL로보틱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일반 주차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로봇발레 주차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차로봇 기술을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역량과 결합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북도청,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력해 청주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주차장에 구축됐다.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 구역 중앙 노란선에 정차하고 시동을 끈 뒤 키오스크를 통해 입차를 신청하면 된다.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파키(Parkie)’가 차량을 들어 올려 자동으로 주차 구역으로 옮긴다. 출

차 시에는 카카오택시알림톡 링크로 출차 요청을 하면 로봇이 차량을 출구 방향으로 돌려 세워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차로봇을 실질적 이용 서비스로 구현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는 CES 2024와 FIX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입주기만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회사는 향후 법·제도 정비에 따라 전국 주요 주차장으로 로봇발레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